https://doi.org/10.21807/JNAS.2019.09.92.087

한국동북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한국동북아논총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24 No. 3, September 2019, 087-111

뉴테러리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남도발

North Korean Provocation Viewed from New Terrorism

김 태 효(Kim, Tae-Hyo)* · 황 인 엽(Hwang, In-Yeop)**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교신저자)

키워드

북한,
도발,
뉴테러리즘,
WMD테러리즘,
사이버테러리즘

초 록

이 글은 한반도 안보의 상당 부분이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21세기의 테러리즘이 대량파괴무기(WMD)와 사이버 위협에 중점을 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국제적 추세가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변화 양태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단순히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규정돼 온 3천여 건의 도발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필자들은 이 중 285건을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북한의 테러리즘이 특정한 정치적 목표 하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공포와 피해를 가하는 테러리즘 본연의 개념에 잘 부합한다는 분석내용을 기초로 한다.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WMD와 사이버라는 뉴테러리즘의 공통된 위협수단과 유형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정치적 목적과 위협의 구사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처함에 있어 국제공조와 국내법규 보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한다.

Keywords

North Korea,
Provocation,
New Terrorism,
WMD Terrorism,
Cyber Terrorism

Abstract

This paper posits that major parts of Korean security should be viewed in terms of terrorism. That is,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 is evolved to the age of 'new terrorism', threats of which is centered arou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cyber attacks; and that exact same trend is occurring in North Korea's new 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Through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on the every single case of North provocation, the authors find that 285 out of 3,000 cases falls into the category of terrorism. This study also examines how North Korean new terrorism is peculiar in terms of its political purposes, means, and types compared to other new terrorisms by different terrorists. Lastly,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domestic regulations will be emphasized.

논문 정보

논문투고일: 2019. 07. 30 심사완료일: 2019. 09. 24 게재확정일: 2019. 09. 27

이 논문은 제1저자가 지도한 교신저자의 석사학위논문 "테러리즘 연구의 재고찰: 한국 테러리즘 유형 분석과 대응책 모색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새로 작성한 것임.

Ⅰ. 서 론

전쟁 이외의 새롭고 다양한 안보위협이 대두한 21세기 글로벌 질서에서 가장 큰 경계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테러리즘, 즉 테러행위이다. 테러리즘의 경우 공격 방식과 그 수단의 진화로 말미암아 더욱 파괴적이고 복합적인 피해를 자아내고 있다. 테러리즘은 전쟁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큰 안보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1)]

테러리즘이 국제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그간 마치 테러와 관련 없는 지역으로 여겨져 왔다. 학계의 연구주제와 정부의 정책논의 모두 한국의 안보를 테러리즘과 직접 연결지어 연구한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21세기 테러리즘에 대한 통합적이고 확장된 시각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각종 안보위협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특정 범주 안에서 취급되다보니, '도발'과 '테러리즘'이 서로 혼용되거나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2)]

동 연구는 최근 테러리즘이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로 표기)와 사이버 위협에 중점을 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국제적 추세가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변화 양태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단순히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규정돼 온 3천여 건의 도발 사례를 전수조사(全數調査)한 결과, 필자들은 이 중 285건을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북한의 테러리즘이 특정한 정치적 목표 하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공포와 피해를 가하는 테러리즘 본연의 개념에 잘 부합한다는 분석 내용을 기초로 한다.

글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테러리즘에 대한 다양한 해설과 개념을 비교 검토하고 현대 테러리즘의 공통된 특징을 몇 가지로 집약한 뒤, 21세기 테러리즘이 WMD와 사이버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다양한 뉴테러리즘의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해설한다. 이어서 북한의 대남 뉴테러리즘이 WMD와 사이버라는 공통된 위협수단과 유형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정치적 목적과 위협의 구사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 끝으로 한국이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처함에 있어 국제공조와 국내법규 보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한다.

---

1) 최진태, "국제테러리즘 발생현황과 한국의 대응 전략," 『군사논단』 제29권(한국군사학회, 2001), p.11; 최진태, "테러리즘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국방연구』 제45권 1호(國防大學校 安保問題硏究所, 2002), p.11.

2) 그 예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연구자들마다 테러리즘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아닌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윤민우의 논문에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테러 행위로 분류한 반면, 흐람치힌 알렉사드르 아나톨리예비치와 이성우는 두 사례를 재래식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한다. 윤민우, "최근 국, 내외 테러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 『경찰학논총』 제9권 3호(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p.236; 흐람치힌 알렉사드르 아나톨리예비치 · 이성우,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남북한관계," 『Jpi정책포럼』 제106권 (제주평화연구원, 2012), p.20.

II. 뉴테러리즘 시대의 도래

1. 테러리즘의 정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즘을 심각한 안보 위협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3] 테러리즘의 양상과 공격대상이 점차 무차별적 성향을 띄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테러라는 실제적 위협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통합된 정의조차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1937년 '테러리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을 시작으로 테러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4] 국가별 · 학자별 · 시기별로 테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기 달라 여전히 테러리즘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테러리즘 정의는 100개 이상으로 파악되며, 분석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이처럼 산재하는 테러리즘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테러리즘을 규정하는 핵심 요건을 네 가지로 추출할 수 있다. 첫째, 테러는 폭력 행위를 수반된다. 여기서 폭력이란 물리적으로 가하는 위협 외에 협박도 포함되는데,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도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6] 이의 연장선상에서 둘째, 테러리즘은 심리적 공포와 두려움을 동반한다. 테러 주체들은 공격 대상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테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실제 사건 이상의 파급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보아즈 가노르(Boaz Ganor)는 테러리즘을 '계획된 심리전(planed psychological warfare)'의 한 형태로 본다.[7] 폴 윌킨슨(Paul Wilkinson) 또한 테러를 더 넓은 범위까지 위협을 미치는 심리적 무기(psychological weapon)로 평가하며, 핵폭발의 위협보다 '심리적 강압(psychological

3) 제26회 G8정상회담에서는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국제조직범죄, 마약 등과 함께 테러리즘을 언급하였다. 또한 2004년 UN위원회에서도 10개의 초국가적 위협 중 하나로 테러를 선정하였다. 전웅, "21세기와 한국의 안보: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안보 위협들," 『국방연구』 제48권 2호(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p.20; 한국국가정보학회, 『21세기 국가방첩: 새로운 첩보전쟁의 시작』(서울: 박영사, 2014), p.61.

4) Ben Saul, "The Legal Response of the League of Nations to Terrorism,"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e Justice* Vol. 4, No. 1 (March 2006), pp.81-82.

5) Jeffrey Record, "Bounding the Global War on Terrorism," *Military Technology* Vol. 28, No. 6 (June 2004), p.6.

6) 테러주체들은 협박만으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심리전의 일종으로 협박을 통해 공포를 확산시킴으로써, 물리적 폭력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물리적 힘을 동반한 폭력 행위와 함께 협박도 테러로 간주하여 볼 수 있다. 최진태, 『대테러학원론』(서울: 대영문화사, 2011), pp.60-61.

7) Boaz Ganor, "Trends in Modern International Terrorism," David Weisburd, Thomas E. Feucht Idit Hakimi and Lois Felson Mock Simon Perry, eds. *To Protect and To Serve: Policing in an Age of Terrorism* (New York: Springer, 2009), p.12.

coercion)' 상태가 더 큰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 셋째, 테러 행위는 반드시 정치적 목적을 지닌다. 이 요건은 테러리즘과 다른 위협 행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9] 토드 샌들러(Todd Sandler)와 월터 엔더스(Walter Enders)는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동기가 없는 폭력 행위는 단순 범죄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다.[10] 최근 테러의 동기가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경향이 있지만 테러리즘을 관통하는 본질적 동인(動因)은 정치적 이유로 귀결된다.[11] 마지막으로 넷째, 테러리즘의 피해 대상에는 비전투원(non-combatant)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 외에도 정부나 언론기관 등에 소속된 주요 요인(要人), 전장 밖에 있는 비전투 군인과 시설 등이 포함된다.[12] 에이드리안 겔크(Adrian Guelke)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비번 상태인 군인도 비전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13]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도 작전 중이 아닌 군인이나 평시 상황에서의 군 관련 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테러 행위라고 규정한다.[14]

이러한 테러리즘의 공통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테러리즘이란 테러 주체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나 비전투 군인 등의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위협이나 폭력, 협박을 사용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피해 대상들의 행동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바꾸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뉴테러리즘의 특징

테러리즘은 최근 갑작스럽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기원전부터 이어져 온 위협행위로 알려져 있는데, 20세기를 기점으로 그 양상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다.[15] 즉 '뉴테러리즘'은 테러의 목표, 테러의 대상, 테러의 수단과 공격유형에 있어서 과거의 테러리즘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테러의

8) Paul Wilkinson, *Terrorism versus Democracy: The liberal state response* (New York: Routledge, 2006), p.183.
9) 앞서 언급한 폭력 행위의 수반, 심리적 공포 및 두려움 확산은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 위협 행위를 가하고 대상에 대해 심리적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테러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행위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 Todd Sandler and Walter Enders, "Applying Analytical Methods to Study Terrorism,"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8, No. 3 (August 2007), p.288.
11) Boaz Ganor, "Defining Terrorism: Is One Man's Terrorist another Man's Freedom Fighter?,"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Vol. 3, No. 4 (January 2002), p.294.
12) 이만종 · 김강녕,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1호(한국테러학회, 2010), p.16; Michael Kronenwetter, *Terrorism: A Guide to Events and Document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2004), p.14.
13) Adrian Guelke, *The Age of Terrorism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New York: Tauris Academic Studies, I. B. Tauris Publishers, 1995), p.148.
14) Kronenwetter, *Terrorism: A Guide to Events and Documents*, p.14.
15) Walter Laqueur, "Postmodern Terrorism," *Foreign Affairs* Vol. 75, No. 5 (September 1996), p.25.

의도와 테러의 방법이 복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진화하면서 사건의 규모와 파급효과가 예전에 비해 가공(可恐)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테러리즘의 본질과 특징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이상, 그 대처방식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16]

1) 뉴테러리즘의 의도

전통적 테러리즘은 협상의 형태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했다.[17] 테러 주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목적과 명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통적 테러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사건이 논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순으로 해결되곤 하였다.

기존의 테러리스트들은 원하는 목표에 따라 공격 대상을 정했다. 즉, '선택적 테러'로 선전 효과가 크거나 상징성이 높은 대상을 공격목표로 삼았다.[18] 대개의 경우 테러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은 테러 공격의 궁극적 목적이 많은 사상자를 내기보다는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공포, 불안, 강박 등의 심리를 확산시켜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19]

이에 반해 뉴테러리즘은 행위의 목적이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테러주체들이 자신의 정체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공격을 가하는가 하면, 테러 행위의 의도를 언급하더라도 추상적으로만 밝히는 경우도 많다.[20] 이 때문에 테러의 목적과 이유를 파악하고 배후세력을 밝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뉴테러리즘은 공격대상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테러주체들은 단순히 접근하기 쉽고 공격이 용이한 불특정 다수를 공격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상자를 통해 공포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1] 목표대상(target)을 한정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사건 규모를 최대화하고 피해 당사국 내지 정치세력의 부담을 최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심리적 욕구를 충족시

16) Bruce Hoffman, "Al Qaeda, trends in terrorism, and future potentialities: An assessment,"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26, No. 6 (November 2003), pp.16-17.

17) 과거의 테러리즘은 정치 투쟁의 한 형태로 나타났다. 테러주체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테러리즘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데, 주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을 인질로 잡아두거나 위협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김용현, "북한의 테러 유형 및 대응전략,"『한국치안행정논집』제2권 2호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6), p.154.

18) 김응수, "글로벌 테러리즘 양상과 한국의 대테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군사논단』제70권 (한국군사학회, 2012), p.171.

19) Walter Laqueur, "The New Face of Terrorism,"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1, No. 4 (December 1998), p.171.

20) 김혁, "탈냉전 이후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의 모색: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자유주의적 접근에 대한 고려,"『國際政治論叢』제42권 2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p.52.

21) Gus Martin, "Types of Terrorism," Maurice Dawson, Dakshina Ranjan Kisku, Phalguni Gupta, Jamuna Kanta Sing and Weifeng Li, eds. *Developing Next-generation Countermeasures for Homeland Security Threat Prevention* (Hershey: IGI Global, 2016), p.3.

키는 것이 뉴테러리즘의 의도[22]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정치적, 심리적 동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뉴테러리즘이 야기하는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반인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도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것임은 분명[23]하다고 하겠다.

2) 공격수단의 진화

전통적 테러리즘에서는 공격 수단이 비교적 한정적이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칼이나 불 등이 테러에 이용되었으며, 폭탄이나 총기류 같은 고전적 재래식 무기도 사용되었다.[24]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인 공격 수단은 폭발물이었다. 토드 샌들러와 월터 엔더스는 테러주체들이 가장 선호한 공격무기(types of attack)로 폭탄 등의 폭발물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196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테러 사건들의 절반 이상이 폭발물을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25] 이처럼 폭발물이 전통적 테러에서 많이 쓰인 것은 사후처리과정에서 증거물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주체와 대상을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통적 테러 공격 수단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피해범위를 확산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격 대상에 충분한 심리적 압박과 위협을 가하여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또한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폭발물 위주의 공격 수단들은 테러 발생 이전에 보안과 검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뉴테러리즘의 공격 수단은 질적으로 다르다. 전통적 테러에서 사용되던 폭발물이나 총기류는 물론, 생화학무기나 사이버 등의 새로운 수단들이 테러에 활용되기 시작했다.[26]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공격 수단들이 진화하였고, 기존에 사용되던 도구들의 경우 원격시스템이 도입되거나 소형화, 경량화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27]

특히 주목할 뉴테러리즘의 공격 수단은 WMD와 사이버이다. 테러주의자들이 수단으로 삼는 WMD에는 화학무기, 생물무기, 방사능무기를 포함하여 핵무기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active, nuclear) 위협으로 지칭된다. 또한 이러한 무기들을 탑재하고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도 뉴테러리즘의 대량파괴무기 수단에 포함시켜야 한다.[28] WMD를 이용

22) 박재풍,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1호(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pp.171-172.
23) 김석용 · 김병조, "탈냉전시대(脫冷戰時代) 테러리즘의 특성(特性)과 한국(韓國)의 대응(對應)," 『국방연구』 제38권 2호(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95), p.8.
24) 오태곤,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21권(한국법학회, 2006), p.370.
25) Sandler and Enders, "Applying Analytical Methods to Study Terrorism," p.291.
26) 김진혁, "국내외 테러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8호(한국경찰학회, 2004), p.33.
27) Adam Dolnik and Rohan Gunaratna, "Dagger and Sarin: The Evolution of Terrorist Weapons and Tactics," Andrew T. H. Tan, eds. *The Politics of Terrorism: A Survey* (New York: Routledge, 2006), p.39.
28) Ersun N. Kurtulus, "The "New Terrorism" and its Critics,"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34, No. 6 (September 2011), p.478.

한 테러 사건은 아직 많지 않으나,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적은 양으로도 무차별 대량 살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선호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는 기존의 테러 방식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공격 수단이다. 테러리즘의 여타 수단들은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사이버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물리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사이버를 통한 테러 공격은 사건 발생 이후 그 원인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사후(事後) 증거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공격 주체를 확실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뉴테러리즘의 공격 수단은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 파괴력이 배가되었고 피해 범위도 전(全)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공격 수단들이 첨단화됨으로 인해 전통적 테러리즘처럼 사전에 도구를 색출해내거나 사후에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 한층 어려워졌다.[29]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장차 뉴테러리즘의 가장 흔하고 파괴적인 공격수단으로 사이버테러가 꼽힌다.

3) 공격유형의 변화와 뉴테러리즘의 특징

20세기 전통적 테러리즘에서 주로 나타난 공격 유형으로는 요인암살테러, 인질납치테러, 항공테러, 해상테러 그리고 폭파테러를 들 수 있다.[30] 요인암살과 인질납치테러는 테러의 정치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심리적 공포와 불안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흔히 활용된 테러 유형이다.[31] 항공테러리즘은 제어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공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극적인 효과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늘 경계의 대상이다.[32] 해상테러는 다른 유형에 비해 빈도수는 많지 않으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될 경우 그 규모와 피해가 적지 않았다. 또한 폭파테러리즘은 공격 장비의 획득과 조작이 손쉽고 사건 발생 이후 증거 인멸이 용이하여 지금까지도 자주 활용되는 테러 유형이다.[33]

요인암살·인질납치·항공·해상·폭파 테러가 휴대 가능한 총기나 폭발물의 수단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공격대상을 겨냥하는 테러의 유형이라면, WMD와 사이버를 활용한 뉴테러리즘은 공격의 시·공간 개념이 한층 확대된 새로운 개념의 공격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WMD 테러리즘의 경우, 완성된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일정량의 핵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유출만으로도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 테러 유형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테러리스트 혹은 이들을 지원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의 손에 핵물질이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국제공조가 WMD 테러리즘의 발생을 차단하는 관건이다.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는 뉴테러리즘의 핵심 유형이며 장차 가장 첨예한

29) David Tucker, "What is New about the New Terrorism and How Dangerous is It?,"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13, No. 3 (September 2001), p.3.
30) 최진태,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호(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p.11.
31) 이만종, "한국의 대테러 환경 취약점과 발전방향," 『한국부패학회보』 제15권 3호(한국부패학회, 2010), p.146.
32) 조영갑,『현대전쟁과 테러』(서울: 선학사, 2009), pp.214-215.
33) 김두현·김정현,『현대 테러리즘의 이해』(서울: 두남, 2009), pp.188-189.

테러리즘의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공간이 21세기 테러리즘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영역이라고 평가[34]받는 이유는 사이버 테러리즘의 공격과 피해의 범위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전통적인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국경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을 막론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테러리즘은 향후 가장 빈번히 활용[35]되는 테러의 유형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목적, 규모, 수단, 유형 등의 기준에 비추어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비교하여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

구분		전통적 테러리즘	뉴테러리즘
목적 및 성격	테러 목적	· 정치적 목적 · 목적이 분명함	· 정치적 목적 · 정치적 목적과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이 혼재
	테러 명분	· 이유가 명확함 · 군사안보적 필요에 의한 명분	·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종교·문화적 요인이 혼재된 경우도 있음
	공격 대상	· 선택적 테러 (희생자와 비희생자가 뚜렷하게 구분) · 구체적 대상에 대한 공격	· 보편적 테러 (불특정 다수가 공격대상) · 모든 대상을 상대로 한 무차별공격
	피해 규모	· 비교적 소규모	· 대규모
공격수단 및 유형	공격 수단	· 폭탄, 총기류 등의 재래식 무기 · 사전 탐지 가능	· 대량파괴무기, 사이버, 하이테크무기 등의 비재래식 무기 · 사전 탐지 어려움
	공격 유형	· 요인암살테러리즘 · 인질납치테러리즘 · 항공테러리즘 · 해상테러리즘 · 폭파테러리즘	· WMD테러리즘 · 사이버테러리즘

34) 윤민우,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서울: 박영사, 2017), p.244.
35)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서울: 대영문화사, 2006), p.174.

III. 한반도 안보와 뉴테러리즘

1. 북한의 대남도발과 테러리즘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한반도는 테러리즘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사건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테러리즘의 성격을 지닌 북한의 대남 도발은 대부분 단순한 군사도발로 취급되었다.[36] 대한민국 국방부는 분단 이후부터 2018년까지 집계한 3,000건 이상의 북한의 대남도발을 모두 테러가 아닌 단순 군사도발로 간주한다.[37] 이렇듯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테러리즘과 별개로 인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테러의 주체를 비국가행위자로 한정하는 관행에 따라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된다고 간주하고 북한의 도발을 테러리즘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추구하는 모든 목표는 군사적 성격을 지닌다[38]고 보는 것이다. 물론 어떤 군사적인 목표도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지만 상이한 정치체제가 적대적으로 대치한 상황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별다른 정치성을 내포하지 않은 순수한 군사적 성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테러리즘을 다룬 연구들을 망라해 보면 이제까지 한국에서 국제테러조직이나 한반도 밖의 테러지원국과 연계되어 발생한 테러리즘 사례가 확인된 바가 없다.[39] 이를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에서 테러리즘으로 볼만한 사건의 행위주체는 (대한민국 국내세력이 아니라면) 곧 북한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승철·권정훈의 연구는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의 92%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분석한다.[40] 필자들이 분단 이후부터 2018년 기간 사이에 발생한 3천여 건의 북한의 도발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테러리즘 요건에 부합한 사례는 총 285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2〉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추이와 유형[41]

1950년대 (10건)					
55.05.10	조기잡이 하던 어선단에게 기관총 집중사격	해상	58.04.30	어선 다복호, 풍영호, 신흥호 납북	해상
55.05.28	대성호 선원 피랍 사건	해상	58.05.14	어선 신복2호 납북	해상
57.11.09	동해에서 어선 7척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	해상	58.11.07	어선 신명호와 금구호 납북	해상
58.02.16	부산-서울 민항기(KNA 창랑호) 피랍사건	항공	58.12.06	동해상에서 어선 7척 납북	해상
58.04.28	어선 명규호 납북	해상	59.11.13	어선 용진호 등 3척이 북한으로 나포	해상

36)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p.351.
37)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8), p.267.
38)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서울:플래닛미디어, 2018), p.615.
39) 최진태, 『대테러학원론』, pp.133-134; 장성진·김영현·신승철, "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2호(한국경호경비학회, 2017), p.78.
40) 이승철·권정훈,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국의 테러 대응방향에 관한 고찰," p.160.
41) 아래의 285건 사례는 역대 「국방백서」와 「북한인권백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북한의 도발과 테러리즘에 관한 논문들을 참고하여 추출, 재생산한 것이다.

1960년대 (68건)					
60.07.22	백령도-인천항 선박 피격으로 선원 1명 사망	해상	67.12.21	어선 남풍호 납북	해상
61.04.07	동해에서 어선 6척, 어부 43명 납북	해상	67.12.25	동해에서 어선 4척과 어부 34명 납북	해상
64.03.01	어선 보승2호 납북	해상	68.01.06	동해에서 어선 3척과 어부 31명 납북	해상
64.03.20	백령도 근해에서 선박 2척, 어부 26명 납북	해상	68.01.11	어선 대한호와 행덕호가 납북	해상
64.07.19	어선 강화호 납북	해상	68.01.21	김신조 사건 (임무: 청와대 습격, 박정희 대통령 암살)	요인암살
64.07.29	어선 부영호 납북	해상	68.03.10	어선 기성호 납북	해상
64.10.16	어선 신성2호 납북	해상	68.04.17	어선 창영호 납북	해상
65.04.26	대청도 근해에서 어선 1척, 어부 12명 납북	해상	68.04.27	어선 종진호 피랍	해상
65.05.08	어선 광명호 납북	해상	68.05.05	어선 흥덕호 납북	해상
65.05.31	어선 대영호 납북	해상	68.05.09	어선 신진호 납북	해상
65.07.18	경기도 송추, 무장간첩침투 (임무: 박정희 대통령 암살)	요인암살	68.05.23	어선 대성호 납북	해상
65.10.24	무장간첩 강원도 양구군 민가 습격사건	요인암살	68.05.29	어선 춘덕3호, 성운호 납북	해상
65.10.29	서해 강화도, 어선들과 어부 109명이 납북	해상	68.06.01	어선 순덕호 납북	해상
65.11.15	어선 춘곡호 납북	해상	68.06.06	어선 부길호, 영신호, 덕산호 납북	해상
65.11.20	어선 명덕호, 덕삼호 납북	해상	68.06.08	어선 풍년도 납북	해상
65.11.26	어선 대양79호 납북	해상	68.06.12	어선 영신호 납북	해상
65.11.30	어선 행영호 납북	해상	68.06.16	어선 해양호 납북	해상
66.01.22	부산 60t급 어선 길용호 납북	해상	68.06.17	어선 취영호와 복성6호 납북	해상
66.01.26	어선 영농호 납북	해상	68.06.21	어선 성북2호 납북	해상
66.06.24	어선 대영호 납북	해상	68.06.23	어선 경흥호 납북	해상
66.11.29	동해에서 어선 동성호 납북	해상	68.06.29	어선 경북호 납북	해상
67.04.12	백령도 부근에서 천대11호 납북	해상	68.07.02	어선 금융호, 신영호, 창명호 피랍	해상
67.05.23	어선 창성호 납북	해상	68.07.04	어선 백구17호 납북	해상
67.05.27	연평도 근해, 어선 포격 사건 (1척 좌초)	해상	68.07.10	어선 태양호, 만복호, 가덕호 납북	해상
67.05.28	어선 승용호 납북	해상	68.07.12	어선 덕성호 피랍	해상
67.05.29	어선 태영호 납북	해상	68.08.05	남천 제3철교 폭파미수사건	폭파
67.06.05	연평도 인근 해상, 풍복호 및 선원 8명 납북	해상	68.08.06	어선 대복1호 납북	해상
67.06.15	어선 부성3호 납북	해상	68.08.07	어선 덕수2호 납북	해상
67.07.22	어선 정진호 납북	해상	68.10.30	어선 용명호, 해진호, 영창호 등 납북	해상
67.09.05	경원선 열차 폭파사건	폭파	68.11.07	어선 양진호, 동일호, 해승호 등 납북	해상
67.09.09	서울-문산 간 철도 폭파사건	폭파	68.11.08	어선 영덕호, 수진호, 풍성호 납북	해상
67.09.13	경의선 열차 폭파사건	폭파	69.05.01	어선 신흥2호 납북	해상
67.11.03	동해에서 어선 12척, 어부 81명 납북	해상	69.05.10	어선 순호, 신성호 납북	해상
67.12.20	어선 청진호 납북	해상	69.12.11	강릉-서울 민항기(KAL YS-11기) 피랍사건	항공
1970년대 (26건)					
70.04.29	어선 봉산21호와 봉산22호 나포	해상	72.06.09	어선 유풍호 납북	해상
70.06.22	어선 금강산호 납북	해상	72.08.14	어선 금성3호 납북	해상
70.06.22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 (임무: 박정희 대통령 암살)	요인암살	72.08.21	어선 일진6호 납북	해상
70.06.30	어선 남일7호 납북	해상	72.12.28	어선 오대양 61·62호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	해상
70.07.08	어선 만복1호와 만복2호, 무진호 납북	해상	73.07.27	어선 신진1호 납북	해상

1970년대 (26건)					
71.01.16	서해에서 조업중이던 휘영37호 납북	해상	73.11.24	어선 대영호 납북	해상
71.01.23	속초-서울 KAL F-27항공기 납북미수사건	항공	74.02.15	백령도 공해상, 어선 1척 격침 및 1척 납북	해상
71.05.14	어선 창동1호 납북	해상	74.08.15	문세광 사건 (박정희 대통령 암살미수사건)	요인암살
71.12.25	어선 해행1호 납북	해상	75.08.17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천왕호 납북	해상
72.01.10	어선 동진호 납북	해상	77.05.10	어선 통일호 납북	해상
72.02.04	대청도 공해상, 어선 1척 격침 및 5척 납북	해상	77.08.12	전남 흥도에서 이민교, 최승민군 납치 사건	해상
72.05.04	어선 금해11호 납북	해상	78.08.10	전남 흥도에서 이명우, 홍건표군 납치 사건	해상
72.05.12	어선 해영2호 납북	해상	78.08.15	군산 선유도에서 김영남군 납북 사건	해상
1980년대 (16건)					
80.01.26	서해상에서 어선 제6·7해왕호 납북	해상	86.07.31	SCUD-B 개량형 미사일 1발 발사	WMD
80.09.08	거진 앞바다에서 어선 제2거진호 납북	해상	86.09.14	김포공항 1층 입국장 폭파 사건	항공
83.07.29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월성지역 침투기도사건	폭파	87.01.15	백령도 인근 공해상, 어선 제27동진호 납북	해상
83.09.22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폭파	87.10.07	백령도 공해상, 어선 제31진영호 피격 사건	해상
84.04.11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WMD	87.11.29	민항기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사건	항공
84.04.23	SCUD-B 개량형 미사일 발사	WMD	89.01.28	백령도 공해상, 어선 제37·38태양호 납북	해상
1985.03	SCUD-B 개량형 미사일 1발 발사	WMD	89.05.04	연평도 해상에서 어선 삼진호 납치기도 사건	해상
86.05.07	SCUD-C 미사일 2발 시험발사(성공)	WMD	89.05.07	대청도 해상에서 어선 1척, 선원 4명 납북	해상
1990년대 (9건)					
90.05.25	노동미사일 1발 최초 시험발사	WMD	93.05.30	SCUD 미사일 3발 발사	WMD
91.02.05	백령도 해역, 한·중 합작 남해어006호 납북	해상	95.05.30	어선 제86우성호 납북	해상
91.06.05~7	SCUD-C 미사일 7발 발사	WMD	97.02.15	이한영(김정일의 처조카) 피살 사건	요인암살
92.08.27	어선 진복호 납북	해상	98.08.31	대포동1호(광명성1호) 1발 시험발사(성공)	WMD
93.05.29	동해안에서 노동1호 미사일 1발 시험 발사	WMD			
2000년대 (19건)					
04.03.08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위협	요인암살	2008.02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유포	사이버
2005	국내 기관 홈페이지·이메일 해킹 (자료절취목적)	사이버	09.04.05	대포동2호(광명성2호) 1발 발사	WMD
05.05.04	KN-02 미사일 1발 발사	WMD	09.05.25	제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WMD
05.08.28	어선 신영호, 광명호, 동영호 나포	해상	09.07.02	KN-01 추정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4발 발사	WMD
06.01.25	북한 추정 사이버공격, 인터넷 대란 발생	사이버	09.07.04	노동미사일 2발과 SCUD 미사일 5발 발사	WMD
2006.02	청와대·정부기관에 사이버공격(개인정보유출 목적)	사이버	09.07.07	7·7디도스(DDoS) 공격 (국가주요기관·은행 등)	사이버
06.07.05	탄도미사일 7발 발사	WMD	2009.09	게임업체 및 개인 대상, 악성코드를 유포	사이버
06.10.09	제1차 핵실험	WMD	09.10.12	KN-02 미사일 5발 발사	WMD
2007	기관 홈페이지·관련자 이메일 해킹(자료절취)	사이버	2009.11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악성코드 유포	사이버
2008~12	제18대 국회 중 261건의 해킹 사건 발생	사이버			
2010년대 (137건)					
2010	외교·안보·통일 등의 연구 기관 공격	사이버	15.10.20	청와대·국회·통일부 대상으로 서버 해킹	사이버
10.04.20	탈북자 위장 간첩 2명 침투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목적)	요인암살	2015.11	국내 금융보안업체 해킹 및 인증서 유출, 악성코드 10개 기관 PC 19대에 유포	사이버

2010년대 (137건)					
10.08.08	동해상에서 어선 대승호 나포	해상	15.11.28	동해에서 SLBM 발사(성공)	WMD
10.08.23~25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GPS전파교란	사이버	2016.01	철도운영기관 직원들에게 피싱 메일 유포	사이버
10.10.19	탈북자 위장 간첩 L모씨 침투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목적)	요인암살	16.01.06	제4차 핵실험	WMD
10.11.23	연평도 포격사건	폭파	16.01.08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 발사	WMD
2011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건 해킹 의혹	사이버	16.01.13~14	정부기관 사칭 메일발송, 정부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	사이버
2011	게임사 회원 1320만명 개인정보 해킹	사이버	16.02.07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2호 1발 발사	WMD
2011	고위탈북자 암살을 위해 공작원 남파	요인암살	2016.02~03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사이버
11.03.03	GPS전파교란	사이버	2016.03	금융보안 소프트웨어업체 서버 해킹	사이버
11.03.04	은행, 정부기관 등 40여 곳에 디도스(DDoS) 공격	사이버	16.03.03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KN-09) 6발 발사	WMD
11.03.04~14	수도권·강원도 해상 GPS전파교란	사이버	16.03.10	동해상으로 SCUD 미사일 2발 발사	WMD
11.03.06	GPS전파교란	사이버	16.03.18	동해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WMD
11.04.12	농협전산센터 서버 273대 자료파괴, 전산망 20여일 동안 마비	사이버	16.03.21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KN-09) 5발 발사	WMD
2011.07	네이트 등의 고객 300만 명 개인정보해킹	사이버	16.03.29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KN-09) 1발 발사	WMD
11.08.04	북한 오토프로그램 사건	사이버	16.03.31	GPS전파교란	사이버
11.09.06	남한 보수시민단체 간부 대상, 독침 테러 시도	요인암살	2016.04	한진중공업, SK 서버 해킹	사이버
11.09.16	반북활동가 박상학에 대한 독극물 암살시도	요인암살	16.04.01	3차례의 GPS전파교란	사이버
11.11.16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개인정보 해킹·메일 악성코드 유포	사이버	16.04.02	GPS전파교란	사이버
2012	북 정찰총국과 연계해 DDoS공격 악성코드 국내 반입·유포	사이버	16.04.15	동해로 무수단 미사일 1발 발사	WMD
12.01.11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WMD	16.04.24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 발사	WMD
14.04.13	광명성3호(개량형 대포동2호) 1발 발사	WMD	16.04.28	동해로 무수단 미사일 2발 발사	WMD
12.04.28~05.13	수도권 서북부 지역 GPS전파교란	사이버	2016.05	대한항공 서버 해킹	사이버
12.06.09	중앙일보 홈페이지 전산망 마비	사이버	16.05.31	동해로 무수단 미사일 1발 발사	WMD
12.06.26	기획재정부(영문 홈페이지) 해킹사건	사이버	2016.06	160개 한국기업·정부기관 14만개 시스템 해킹	사이버
12.12.12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2호 1발 발사	WMD	16.06.22	동해로 무수단 미사일 2발 발사	WMD
13.02.10	동해로 KN계열 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 발사	WMD	2016.07	인터넷 쇼핑업체 고객정보 해킹, 3억원 상당 비트코인 요구	사이버
13.02.12	제3차 핵실험	WMD	16.07.09	SLBM 1발 발사	WMD
13.03.05	스팸 메일 발송용 프로그램 악용해 사이버테러 (개인정보를 빼내 북한 해커들과 정보 공유)	사이버	16.07.19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WMD
13.03.15	동해로 KN계열(KN-02 추정) 미사일 2발 발사	WMD	2016.08	대우조선 서버해킹으로 이지스함 체계도 유출	사이버
13.03.20	방송사·금융사 전산망마비·서버해킹, 악성코드 유포	사이버	16.08.03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WMD
13.05.18	동해로 신형 방사포(KN-09 300mm) 6발 발사	WMD	16.08.24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 SLBM) 1발 발사	WMD
13.05.19	동해로 300mm 방사포 1발 발사	WMD	16.08.25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 발사(부분성공)	WMD
13.05.20	동해로 KN계열 미사일 2발 발사	WMD	16.09.05	동해상으로 SCUD-ER 미사일 3발 발사	WMD
13.06.25	6·25사이버테러(청와대·주요정부기관 등에 디도스)	사이버	16.09.09	제5차 핵실험	WMD

2010년대 (137건)					
13.06.26	동해로 300mm 방사포 4발 발사	WMD	16.10.15	동해로 무수단 미사일 1발 발사	WMD
13.12.22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국방부 정책자문위원 150여 명에게 해킹메일·악성코드 유포(정보절취목적)	사이버	16.10.20	동해로 무수단 미사일 1발 발사	WMD
14.02.21	이산가족행사 중 동해로 신형방사포(KN-09) 4발 발사	WMD	2017.02	무역협회, 연구기관 등 9곳에 워터링 홀 공격	사이버
14.02.27	동해로 SCUD 미사일 2발 발사	WMD	17.02.12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미사일 1발 발사	WMD
2014.03	육군 사령부 인터넷망을 해킹('화학물질 사고 대응 정보시스템'에 접속가능한 인증서 탈취)	사이버	17.03.06	SCUD-ER 4발 발사	WMD
14.03.03	동해안으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WMD	17.03.22	무수단 미사일 발사(실패)	WMD
14.03.04	동해로 신형 방사포(KN-09) 7발 발사	WMD	17.04.05	탄도미사일 화성-12형 1발 발사	WMD
14.03.16	동해로 FROG 로켓 25발 발사	WMD	17.04.16	탄도미사일 화성-12형 1발 발사	WMD
14.03.22	동해로 FROG 로켓 30발 발사	WMD	17.04.29	탄도미사일 화성-12형 1발 발사	WMD
14.03.23	동해로 FROG 로켓 16발 발사	WMD	2017.05	병원, 대학교 등 21곳 랜섬웨어 워너크리아 공격	사이버
14.03.26	동해안으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WMD	2017.05	은행 노조홈페이지 해킹·금융기관에 악성코드 유포	사이버
2014.04	국방과학기술연구소 PC감염, 2·3급 기밀 유출	사이버	17.05.14	탄도미사일 화성-12형 1발 발사	WMD
14.06.26	동해로 신형 방사포(KN-09 추정) 3발 발사	WMD	17.05.21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1발 발사	WMD
14.06.29	동해상으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WMD	17.05.29	SCUD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WMD
14.07.02	신형전술미사일(300mm방사포 추정) 2발 발사	WMD	2017.06	빗썸 악성코드 유포 및 정보유출 (북한추정)	사이버
14.07.07	7·7디도스(DDoS) (3차례 디도스 공격)	사이버	17.06.08	지대함 순항 미사일(KN-01) 4발 발사	WMD
14.07.09	동해상으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WMD	17.07.04	탄도미사일 화성-14형 1발 발사	WMD
14.07.13	동해상으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WMD	17.07.05 ~08.08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 4개 업체, 직원 컴퓨터를 악성프로그램 감염 (비트코인 탈취 목적)	사이버
14.07.14	동해로 방사포 및 해안포 100여발 발사	WMD	17.07.27	탄도미사일 화성-14형 1발 발사	WMD
14.07.26	동해상으로 SCUD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WMD	2017.08	한국은행 서버 해킹 시도	사이버
14.07.30	신형전술미사일 (300mm 방사포 추정) 4발 발사	WMD	17.08.26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WMD
2014.08 ~2015.04	대학병원 전산망 서버 장악 후 사이버공격	사이버	17.08.29	탄도미사일 화성-12형 1발 발사	WMD
14.08.14	신형전술미사일 (300mm방사포 추정) 5발 발사	WMD	2017.09	하나투어 서버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14.12.15~ 15.03.12	한국수력원자력 조직도·설계도 등 85건 자료유출 (원전가동을 중지하라고 협박)	사이버	2017.09	SI업체 서버 해킹	사이버
2015	국내외 방산업체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사이버	17.09.03	제6차 핵실험	WMD
15.02.16	동해에서 함대함 미사일(KN-01) 4발 발사	WMD	17.09.15	탄도미사일 화성-12형 1발 발사	WMD
15.03.02	동해상으로 SCUD 미사일 2발 발사	WMD	17.09.25	자유한국당 의원실, 한국은행 7·8차례 해킹 시도	사이버
15.04.02	KN-02 1발 발사	WMD	17.11.29	탄도미사일 화성-15형 1발 발사	WMD
15.04.03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KN-09) 4발 발사	WMD	17.11.30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WMD
15.04.07	서해로 KN계열 미사일 2발 발사	WMD	18.04.27	한국 외교·안보·통일 분야 싱크탱크 등의 웹사이트 해킹 및 악성코드 공격 (워터링 홀·스피어피싱)	사이버
15.05.08	동해 해상에서 SLBM 1발 시험발사	WMD	2018.06	정부기관 및 언론 관계자들 대상 스피어피싱 공격	사이버
15.05.09	동해로 KN계열 미사일 3발 발사	WMD	2018.06 ~07	한국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웹사이트 해킹·악성코드 유포 시도	사이버
15.06.14	동해로 KN계열 미사일 3발 발사	WMD	18.07.03	북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해킹 및 스피어피싱 공격 (정보 탈취 목적)	사이버
2015.10	서울메트로(1~4호선) 서버 해킹	사이버			

필자들은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리즘과 별개로 규정한 그간의 관행이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첫째, 국제사회의 관행상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으로 칭하여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셈이 되므로 비국가행위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테러리즘과 북한은 서로 무관하다는 논리를 살펴보자. 국내법인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하므로 국내법 우선주의를 적용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설령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가 테러리즘을 직접 기획하거나 테러리스트들을 은닉·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도 테러리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점차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다.[42] 더욱이 북한은 정권차원에서 테러리즘을 지휘하고 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43] 모든 대외 도발과 테러리즘은 반드시 북한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된다는 점에서 북한정권은 곧 테러리즘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라는 전제가 성립한다.

둘째, 북한의 대남도발은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되므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테러리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역시 반박되어 마땅하다. 먼저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서 북한의 직접적 테러 대상이 한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44] 북한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대남 테러리즘을 자행해왔는데, 이로 인해 간간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45] 북한의 대남 테러공격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남한 사회에 혼란을 유도하여 한반도 적화통일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46] 이와 함께 대남 적화 정책의 방해 요소로 인식되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남한에 반미감정을 조장하거나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남 도발과 테러리즘은 북한 내부의 정권교체 시기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47] 이는 한국과 미국 등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주민의 적대감을 형성하여 내부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키고[48] 북한정권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다. 3대 세습의 권력구조가 지탱하는 북한체제의 가장 특수하고도 절대적인 목표는 최고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보호하

42) 이만종·김강녕,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비전략," p.21; 테러를 대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곳은 테러 수출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 쿠바, 리비아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태윤,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미 9·11테러와 대테러 전쟁의 실체』(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4), p.78.

43) 설종길, "한반도에서의 제4세대 전쟁양상과 대응방안," 『군사발전연구』 제10권 1호(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6), pp.137-138.

44) 김선일,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에 관한 고찰," 『군사연구』 133호(육군군사연구소, 2012), p.293; 북한은 1961년 4차 노동당대회 결의서(決意書)에 대남 테러를 통해 한국 정치체제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으며,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와 1965년 노동당 창설 20주년 축사 그리고 1966년 10월 14차 전원회의에서도 대남 테러리즘에 대한 노선을 확실히 명시하였다. 이만종·김강녕,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비전략," p.10.

45)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북한의 테러 유형과 역사적 교훈," 『군사』 44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12.

46) 오광세·황태섭,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전략과 대응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20권 1호(한국동북아학회, 2015), p.120.

47) Tae-Hyo Kim, "Game Changer: North Korea under the Obama-Lee Partnership and Beyond," *Korea Observer* Vol. 44, No. 2 (Summer 2013), p.298; 김태효·강채연,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週期) 모델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國際政治論叢』 제58권 2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18), pp.64-65.

48) 김선일,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에 관한 고찰," p.293.

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9]

북한 정권은 테러리즘을 대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50] 정치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을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사실[51]을 보더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의 상당 부분을 테러리즘의 견지에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북한의 대남 테러 공격은 그 배후가 북한으로 의심되더라도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테러리즘을 활용한 대외정책을 더욱 공세적으로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2. 북한의 뉴테러리즘

앞서 살펴본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에 깃든 정치적 목표는 매우 일관되고 분명하게 유지돼 온 반면, 그러한 정치적 목표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테러의 수단과 유형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테러 유형은 해상테러리즘으로(동 기간 99건의 해상납치 및 폭파 사건 발생, 〈표2〉 참조), 이 기간 동안 전통적 테러 공격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1965~74년 사이의 4차례 요인(要人) 암살 시도, 1987년 KAL 858기 항공기 폭파 사건도 대표적인 전통적 테러리즘 사례들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WMD테러와 사이버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 유형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표2〉에 정리한 북한의 시기별·유형별 대남 테러리즘 사례를 분석하면 1990년대에 총 9건 중 5건이 WMD관련 테러리즘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10년 간 총 19건의 사례 중 17건이(WMD 8건, 사이버 9건) 뉴테러리즘이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뉴테러리즘의 비중과 빈도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7월 3일까지 집계한 137건 중 7건을 제외한 130건이 뉴테러리즘으로 분류된다(WMD 76건[52], 사이버 54건).

국제적으로 뉴테러리즘의 확산이 일반적인 기조이며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으나, 국력과 첨단재래식 군비(軍備)에 있어 한국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놓인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뉴테

49) 오광세·황태섭,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전략과 대응방안," p.129.

50) 염동용, "북한 대남 전략전술의 분석과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제2권 1호(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p.36; 억압적인 국가들(repressive states)의 경우 국내정책 옵션으로 테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제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들(antagonistic states)은 외교정책으로 테러리즘을 채택하고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Gus Martin, "Types of Terrorism," p.5.

51)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1월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8년 10월, 핵시설 검증 합의를 조건으로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핵·미사일 개발,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통한 요인암살, 국제테러지원 등을 이유로 미국은 2017년 11월 20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게 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에서도 해상납북이나 항공기폭파 등과 같은 비인도적인 북한 테러리즘 행위에 대해 상당부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76건 중 7건은 방사포, 단거리 로켓, 해안포 발사로 엄밀히 말하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한 WMD 테러리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가하는 WMD 위협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각종 방사포 위협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정치전(政治戰)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러리즘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WMD와 사이버 테러리즘의 빈도와 강도를 늘리는 이유는 직접적인 침공이나 물리적 도발을 일으키지 않고도 자신에게 돌아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에 미치는 피해와 파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유한 뉴테러리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차례로 검토해 본다.

1) 북한의 WMD테러리즘

아직까지 한반도에서는 WMD무기나 관련 물질을 실제로 사용한 군사공격이나 테러리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1차적 목표는 이를 통해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고 남북한 체제경쟁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WMD테러리즘의 특징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의 의지에 대한 위협만 상대방에 확인시키더라도 소기의 정치적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와 같이 민간조직이 아닌 정권이 직접 나서서 테러리즘을 관장할 경우 더욱 위력적이고 파괴적인 양상[53]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여타 WMD 보유국에 비해 WMD 위협을 활용한 심리전과 대외협상 등 정치적 비중이 월등히 높은 WMD 테러전을 전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WMD테러리즘의 전략적 효용을 전제로, 북한은 남북한 관계가 우호적인 시기에도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며 핵과 생화학 무기,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핵무기 개발은 1950년대에 착수했고, 196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핵시설을 조성하였다. 1980년대에는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고 여러 차례의 고폭 실험도 진행하였다.[54] 1992년 국제사회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알려진 이후(제1차 북핵위기)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조치를 이끌어냈지만(1994년 제네바합의), 북한은 동 합의를 어기고 고농축우라늄 시설(UEP: Uranium Enrichment Plant)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2001년 발각돼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이후 6자회담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외교는 2019년 현재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멈추는데 실패하였다. 앞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진보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기도하는 대남 위협과 심리전의 파괴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 역사는 핵무기만큼 깊다. 1961년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을 기점으로 생화학무기 개발이 본격화되었다.[55] 현재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생화학무기를 자체 배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56], 보유량을 비롯한 생화학무기 능력이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재

53)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pp.565-567; 설종길, "한반도에서의 제4세대 전쟁양상과 대응방안," p.122.
54) 국방부, 『국방백서 1999』(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1999), p.45.
55) 윤지원, "김정남 사건의 경고: 4세대 전쟁과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대비," 『國防과 技術』 458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7), p.120.
56) 2017년 기준으로 북한은 25종의 화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2,500톤 이상의 생화학무기를 비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합뉴스, "'또 하나의 위협' 北생화학무기... 핵보다 탐지 어렵다," 『연합뉴스』, 2017년 2월 25일,

북한의 WMD테러리즘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결합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돼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생물학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관련 국제레짐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미사일 탄두에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가된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남한 전역(全域)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구비한데 이어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57] WMD테러의 잠재적 피해 대상을 한국에서 미국, 일본까지 확대하여 정치적 협상의 지렛대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북한의 WMD 테러 능력은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들의 범주를 넘어 세계 차원의 안보질서를 위협한다. 북한은 자신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관련기술을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들에 판매하고 공급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과정에 기존 핵보유국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는 그들이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대상이 미얀마, 파키스탄 등을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58]

2) 북한의 사이버테러리즘

사이버테러리즘은 오늘날 북한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테러 공격 유형이다. 일찍이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능력을 습득해 온 북한은 1990년대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부대를 창설하고 사이버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하였다.[59] 앞서 〈표2〉에 적시되어 있듯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WMD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7·7 디도스(DDoS) 사건(국가주요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테러)이나 2013년 3·20 사이버테러(주요 언론사와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와 6·25 사이버테러(청와대, 주요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의 예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사이버 테러리즘이 지속되었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도 해킹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60]

북한이 사이버테러리즘 역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대남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 첫째,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병력과 한·미 연합전력의 상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5037400014(검색일: 2018년 11월 15일).

57)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2), p.29;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8: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13.

58) 이만종,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1호(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pp.160-161.

59) 김응수, "글로벌 테러리즘 양상과 한국 대테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p.174.

60) YTN, "美 보안업체 "北 사이버 공격 세계 위협…인터넷 없이도 해킹"," 『YTN』, 2018년 2월 21일, https://www.ytn.co.kr/_ln/0104_201802210623466522(검색일: 2019년 6월 3일).

대적 우위를 감안할 때, 사이버 공간에서 적을 공격하고 교란하여 먼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61] 북한은 남한사회 내부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 거짓 선동을 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거나 논리폭탄(Logic Bomb)등과 같은 공격방식을 사용하여 사회기간망을 마비시키기도 한다.[62]

둘째, 사이버테러는 북한의 주요 정보수집 창구이다. 외교안보 당국자 또는 고급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을 구체적인 목표물로 설정하여 공격하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수법이 흔히 활용된다. 국가기관과 민간시설을 가릴 것 없이 군사와 민간 용도에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기술과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적출해 간다.

셋째, 사이버테러리즘은 북한정권의 통치자금 확보 수단으로도 악용된다.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가상화폐(암호화폐: block chain)가 확산되고 다양한 사이버·온라인상 지불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해킹기술은 곧 사이버상 금전의 탈취 가능성을 시사[63]하게 되었다.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얻은 자금은 다시 북한의 대내 통치기반을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나아가 WMD테러리즘 등 다양한 방식의 대남 위협 능력 강화에 전용(轉用)된다.

Ⅳ. 정책고려사항

현대 테러리즘의 추세가 WMD위협과 사이버공격으로 대표되는 뉴테러리즘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수행주체로 비국가행위자는 물론 일부 '불량국가(rogue states)'까지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최근 학계의 일반적인 추세임을 지적하였다. 물론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라고 하여 무조건 WMD 위협을 외부에 가하는 테러리스트 국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부가 과거에 테러행위를 직접 기획하고 가담한 전력(前歷)이 있고 현재에도 정상적인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변국들에 핵 위협을 가한다면, 이 때 핵무기는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을 넘어 고도의 정치성과 폭력성을 동반한 테러리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64] 현재 북한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로, 같은 WMD와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한 여타 국가들과 달리 그 사용목

61) 김진혁, "국내외 테러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p.32.

62) 이외에도 워터링 홀(Watering Hole)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Cross Site Scripting)과 같은 공격 유형이 있는데, 사회 내부에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 하에 일반 시민과 민간영역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63) 파이낸셜뉴스, "대북제재에 돈줄 마르자…FBI "北 사이버 범죄 감행"," 『파이낸셜뉴스』, 2019년 4월 18일, http://www.fnnews.com/news/201904180905233847(검색일: 2019년 5월 20일); 신충근·이상진,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4호(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3), p.224.

64) 21세기 들어 테러리즘의 수행주체로 나선 국가들(state sponsors of terrorism)이 늘었으며 특히 억압적인 국가들(repressive states)이 테러리즘을 대내외 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Paul R. Pillar,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pp.157-196; Gus Martin, "Types of Terrorism," p.5.

적과 공격 양태가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65]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결합한 WMD 테러리즘은 한국의 안보와 동맹네트워크를 약화시켜 외교적인 고립을 이끌어내고자 함이며, 한국의 전략기간망과 민간네트워크를 겨냥한 사이버 테러리즘은 한국사회의 결속력과 지식, 정보를 총체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된다. 북한의 대남 전면전 공격이나 기습 국지도발은 군사적 대응의 영역이다. 이에 비해 평상시에 한국이 항시 공격 대상으로 노출돼 있는 북한의 뉴테러리즘은 직접적 군사충돌이 아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정보 영역에 걸쳐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복합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실제로 WMD를 사용한 공격을 가해오지 않더라도 이의 보유사실 내지 사용의지에 관한 위협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태세나 대북정책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 또 점차 첨단화돼 가는 사이버 공격 수법으로 인해 한국이 신속한 진상조사와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대규모 피해를 입을 개연성도 크다.

한국은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노출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국제공조와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WMD 개발은 국제 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 regime)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한국의 안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북한의 핵기술·핵물질·핵인력 등 핵 인프라와 탄도미사일이 여타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에 유출될 경우, 이는 한반도 바깥에서 더 크고 복잡한 테러리즘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66]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폐기하려는 외교적·군사적 노력에 매진하는 동시에 북한의 WMD가 국제사회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정보공유, 감시, 대응체제 강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WMD 능력의 실존사실과 이의 사용의지에 관한 위협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적·정치적 목표를 차단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주한미군, 한미군사훈련, 유엔사령부 등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작동해 온 대북 억지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카드가 활용되지 않도록 긴밀한 대미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범위가 한국의 사이버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은행이나 가상화폐로까지 확대된 시점에서 글로벌 사회 전체가 사이버 테러리즘의 잠재적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서 공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수단을 앞서가는 암호화 기술 개발 등 사이버 방호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미

65)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탄도미사일 확산방지에 관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WMD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등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탄도미사일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중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Inventory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rganizations and Regimes* (CA, Monterey: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2009), pp.531-569.

66)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파괴무기나 미사일이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The Journal of Political Risk, "North Korea WMD terrorism as much a threat as nuclear-tipped missiles," http://www.jpolrisk.com/north-korean-wmd-terrorism-as-much-a-threat-as-nuclear-tipped-missiles/(검색일: 2019년 4월 8일).

국 등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 기울여야 한다. 또 북한 당국의 '해킹그룹'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여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과 의지를 약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사이버 위협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테러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규제할 수단이 국내적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16년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이 제정[67]되었으나 여기에 사이버테러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내법규와 사회관행은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태세에 있어 매우 안이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에 적시된 테러행위는 총 5가지로 ①인질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행위, ②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위협·파괴 행위, ③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협·파괴 행위, ④생화학 및 폭발성 물질 등으로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⑤핵·방사성 물질이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위협과 파괴행위가 언급되어 있을 뿐, 사이버 상 테러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제10조의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조항에는 테러대상시설과 테러이용수단을 적시하면서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에 의한 공격만 상정할 뿐, 사이버 테러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관한 경각심과 대책 방안이 누락된 상태다.

그간 북한이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을 해킹하여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작전계획 5027·작전계획 5015 등 국가기밀을 탈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려는 시도를 이어온 만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위협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테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68]'을 별도로 신설하여 (1)사이버 테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2)정부 부처와 민간 영역에 산재한 사이버 대응 법체계를 정비하여 역할과 책임 분명히 하며, (3) 사이버 위기관리를 위한 전문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반도가 다양한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왔음을 검증하였다. 그러한 테러의 주체는 다름 아닌 북한이며 북한이 일으킨 3천 건 이상의 대남 안보도발 중 약 1/10 정도는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북한은 전면적인 무력분쟁

67) 동법(법률 제15608호)은 2018년 4월 17일 개정되고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전문(全文)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233&efYd=20181018#0000(검색일: 2019년 9월 14일).

68)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취지에서 '사이버테러기본법' 제정과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해성·윤민우·Joshua Freilich·Steven Chermak·Robert G. Morris,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p.229-284.

이나 전쟁을 통하는 대신, 분단 상황에서 먼저 한국 사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뉴테러리즘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공격자가 그 시기와 대상과 방법을 임의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 법규를 보강하고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신무장과 보안의식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WMD와 사이버 위협 앞에 우리가 단합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때, 상대방에 대한 공포 유발을 전제로 하는 테러리즘의 동인(動因)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233&efYd=20181018#0000(검색일: 2019년 9월 14일).

국방부. 『국방백서 1999』.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1999.

_____. 『2012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2.

_____. 『2018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북한의 테러 유형과 역사적 교훈.” 『군사』 4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두현 · 김정현. 『현대 테러리즘의 이해』. 서울: 두남, 2009.

김석용 · 김병조. “탈냉전시대(脫冷戰時代) 테러리즘의 특성(特性)과 한국(韓國)의 대응(對應).” 『국방연구』 제38권 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95.

김선일.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에 관한 고찰.” 『군사연구』 133호. 육군군사연구소, 2012.

김용현. “북한의 테러 유형 및 대응전략.”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권 2호.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6.

김응수. “글로벌 테러리즘 양상과 한국의 대테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군사논단』 제70권. 한국군사학회, 2012.

김진혁. “국내외 테러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8호. 한국경찰학회, 2004.

김태효 · 강채연.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週期) 모델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國際政治論叢』 제58권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

김혁. “탈냉전 이후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의 모색: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자유주의적 접근에 대한 고려.” 『國際政治論叢』 제42권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박재풍.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1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8.

설종길. “한반도에서의 제4세대 전쟁양상과 대응방안.” 『군사발전연구』 제10권 1호.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6.

신충근 · 이상진.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3.

연합뉴스. “‘또 하나의 위협’ 北생화학무기… 핵보다 탐지 어렵다.” 『연합뉴스』. 2017년 2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5037400014(검색일: 2018년 11월 15일).

염동용. “북한 대남 전략전술의 분석과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제2권 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오광세 · 황태섭.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전략과 대응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20권 1호. 한국동북아학회, 2015.

오태곤.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법학연구』 제21권. 한국법학회, 2006.

윤민우. “최근 국, 내외 테러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경찰학논총』 제9권 3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_____.『(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서울: 박영사, 2017.

윤지원. “김정남 사건의 경고: 4세대 전쟁과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대비.”『國防과 技術』 458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7.

윤해성 · 윤민우 · Freilich, Joshua · Chermak, Steven · Morris, Robert G.『사이버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이만종. “한국의 대테러 환경 취약점과 발전방향.”『한국부패학회보』 제15권 3호. 한국부패학회, 2010.

_____.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1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이만종 · 김강녕.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비전략.”『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1호. 한국테러학회, 2010.

이승철 · 권정훈.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국의 테러 대응방향에 관한 고찰.”『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1호. 한국테러학회, 2010.

이태윤.『(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미 9 · 11테러와 대테러 전쟁의 실체』.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4.

장성진 · 김영현 · 신승철. “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한국경호경비학회지』 52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7.

전웅. “21세기와 한국의 안보: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안보 위협들.”『국방연구』 제48권 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조영갑.『현대전쟁과 테러』. 서울: 선학사, 2009.

최진태. “국제테러리즘 발생현황과 한국의 대응 전략.”『군사논단』 제29권. 한국군사학회, 2001.

_____. “테러리즘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국방연구』 제45권 1호. 國防大學校 安保問題硏究所, 2002.

_____.『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2006.

_____.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_____.『대테러학원론』. 서울: 대영문화사, 2011.

파이낸셜뉴스. “대북제재에 돈줄 마르자..FBI “北 사이버 범죄 감행”.”『파이낸셜뉴스』. 2019년 4월 18일. http://www.fnnews.com/news/201904180905233847(검색일: 2019년 5월 20일).

한국국가정보학회.『21세기 국가방첩: 새로운 첩보전쟁의 시작』. 서울: 박영사, 2014.

흐람치힌 알렉사드르 아나톨리예비치 · 이성우.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남북한관계.”『Jpi정책포럼』

제106권. 제주평화연구원, 2012.

Dolnik, Adam and Gunaratna, Rohan. "Dagger and Sarin: The Evolution of Terrorist Weapons and Tactics," T. H. Tan, Andrew, eds. *The Politics of Terrorism: A Survey*. New York: Routledge, 2006.

Ganor, Boaz. "Defining Terrorism: Is One Man's Terrorist another Man's Freedom Fighter?."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Vol. 3, No. 4. 2002.

_____. "Trends in Modern International Terrorism," David Weisburd, Thomas E. Feucht Idit Hakimi and Lois Felson Mock Simon Perry, eds. *To Protect and To Serve: Policing in an Age of Terrorism.* New York: Springer, 2009.

Guelke, Adrian. *The Age of Terrorism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New York: Tauris Academic Studies, I. B. Tauris Publishers, 1995.

Hoffman, Bruce. "Al Qaeda, trends in terrorism, and future potentialities: An assessment."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26, No. 6. 2003.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Inventory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rganizations and Regimes*. CA, Monterey: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2009.

Kim, Tae-Hyo. "Game Changer: North Korea under the Obama-Lee Partnership and Beyond." *Korea Observer*. Vol. 44, No. 2. 2013.

Kronenwetter, Michael. *Terrorism: A Guide to Events and Document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2004.

Kurtulus, Ersun N. "The "New Terrorism" and its Critics." *Studies in Conflict&Terrorism*. Vol. 34, No. 6. 2001.

Laqueur, Walter. "Postmodern Terrorism." *Foreign Affairs*. Vol. 75, No. 5. 1996.

_____. "The New Face of Terrorism."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1, No. 4. 1998.

Martin, Gus. "Types of Terrorism," Maurice Dawson, Dakshina Ranjan Kisku, Phalguni Gupta, Jamuna Kanta Sing and Weifeng Li, eds. *Developing Next-generation Counter-measures for Homeland Security Threat Prevention*. Hershey: IGI Global, 2016.

Pillar, Paul R.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Record, Jeffrey. "Bounding the Global War on Terrorism." *Military Technology.* Vol. 28, No. 6. 2004.

Sandler, Todd and Enders, Walter. "Applying Analytical Methods to Study Terrorism."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8, No. 3. 2007.

Saul, Ben. "The Legal Response of the League of Nations to Terrorism."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e Justice. Vol. 4, No. 1. 2006.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8: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he Journal of Political Risk. "North Korea WMD terrorism as much a threat as nuclear-tipped missiles." http://www.jpolrisk.com/north-korean-wmd-terrorism-as-much-a-threat-as-nuclear-tipped-missiles/(검색일: 2019년 4월 8일).

Tucker, David. "What is New about the New Terrorism and How Dangerous is It?."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13, No. 3. 2001.

Wilkinson, Paul. *Terrorism versus Democracy: The liberal state response*. New York: Routledge, 2006.

YTN. "美 보안업체 "北 사이버 공격 세계 위협…인터넷 없이도 해킹." 『YTN』. 2018년 2월 21일. https://www.ytn.co.kr/_ln/0104_201802210623466522(검색일: 2019년 6월 3일).